

학술시리즈

한국언론의 위상과 현실

권력과 자본의 논리에 얼룩진 言路

< 1 > 형성과정과 현주소

8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언론의 형성배경과 권력의 관계와 정보의 상품화, 언론의 대기업화를 한국언론의 구조적 모순을 알아보고 한국언론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I. 들어가는 말

언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대중매체 언론을 장악하거나 혹은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세 세력들의 수단과 방법이 보다 고도로 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언론의 대응양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권력과 언론의 관계를 단단하고 저항의 단 순 도식으로 보던 전통적인 관점은 점차 그 유용성을 잃어가고 있다.

언론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기능부터 떠올린다. 권력은 그 본질적인 속성상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 강화하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사회의 언론은 이를 통제하려는 국가권력에 저항하면서 권력의 부패와 남용을 감시하고 비판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야 한다는 것이 언론으로서의 당 수행해야 할 당위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언론은 과연 민중의 권리를 서서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우선시 하는 일반의 인식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인식은 우리의 언론이 과거 국가의 독립을 보전하기 위해 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해서 싸웠으며 또한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어 온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인식은 그 후의 제반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언론의 본질적 변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남아 일종의 고정관념화한 것이다. 다시 말해 제국주의와 싸우던 개화기나 독재정권을 비판하던 1950년대의 언론과 현대의 언론은 본질적인 면에서 여러가지 차이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한국 언론이 권력과 자본의 논리에 얼룩진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볼 것이다. 이리하여 현대 한국언론의 현주소에 대해 보다 과학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I. 권력과 언론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해방 이후 한국 언론의 현태를 살펴보면 국가권력은 언론에 대해 통제와 자유의 양면정책을 통해 끊임없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언론에 대해 부분적으로 저항하기도 하나 결국은 권력의 영향력으로 편입되어 온 역사라고 할 수 있다.

해방 후 미소 양국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분단상황 속에서 언론도 좌파와 우익으로 나뉘어 역사의 새로운 주체로서 등장하려

통제를 시도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1955년 3월 동아일보에 대하여 한나의 오식을 문제삼아 정간처분을 내렸던 일과 1959년 4월 당시 비판적 언론의 선두주자격이었던 경향신문을 폐간시킨 일이다. 이 외에도 자유당정권은 언론인에 대한 각종의 제재조치와 신문사에 대한 테러나 신문배포배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언론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탄압에 대응하여 신문들은 맞서 싸워 나갔으며 이러한 언론정신은 곧 4.19혁명으로 자유당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 것이다. 즉, 비판적 언론이 있었기에 민중들의 독재에 대한 비판의식이 고양될 수 있었고 이러한 비판의식이 있었기에 혁명기에 민중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제2공화국에서 꽃피웠던 언론

은 1965년 5월 16일 새벽의 서울을 물린 총성으로 꺾이고 말았다. 5.16부대타도 집권한 군부세력은 언론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언론정화'라는 명목으로 많은 신문들을 폐간시켰다. 이어 1962년 6월 군사정부는 '언론을 기업으로 육성하고 그 내용을 향상'시킨다는 요지의 새로운 언론정책을 공포하였다. 이는 이후에도 박정희 정권의 언론정책의 기본이 되는 것이며 한국언론이 상 황화 되어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었다.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정치 적 및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언론기업에 여러가지 경제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적 성 장을 가능케 하는 통제와 자유의 양면적 정책을 박정희는 펼쳐 나 갔던 것이다.

오욕의 역사속에서 싹튼 일선 기자들의 자성의식은 6월항쟁이후 언론노조로 결실

이러한 기본정책에 입각하여 군정현장장과 선거 그리고 한일회담 등을 거치면서 박정희 정권은 비판적 논조를 보이는 신문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1964년에는 한일회담에 반대하 는 언론을 규제하기 위해 '언론윤 리위원회'를 제정을 시도하였 다. 이에 언론계는 정부의 입려에 의해 일부 언론사주들이 미온적 인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정책에 입각하여 군정현장장과 선거 그리고 한일회담 등을 거치면서 박정희 정권은 비판적 논조를 보이는 신문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1964년에는 한일회담에 반대하 는 언론을 규제하기 위해 '언론윤 리위원회'를 제정을 시도하였 다. 이에 언론계는 정부의 입려에 의해 일부 언론사주들이 미온적 인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중심이 되어 격렬한 반 대운동을 전개하여 결국 이법의 시행을 보류시키고 말았다.

이와 같이 '언론윤리법'의 시행은 보류되었으나 이를 계기로 언론은 권력 앞에 서서히 굴복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박정희 는 서울의 3대 야당지를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권력앞에 굴복 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경향신문

는 공정기관이 아니라 이윤을 가져다 주는 상업적 수단으로 간주 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III. 1980년대 한국언론의 권언유착

언론의 기업적 성장은 80년대 에 들어서 더욱 강화되었다. 민중 들의 열화같은 민주화외지를 충

신들이 조종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작업을 우선 꾀했다. 또한 언 론기법이라는 악법을 제정하여 언론에 족쇄를 채우고 제갈을 물 렸던 것이다. 그리고 남아있는 언론과 언론인에 대해서는 많은 물질적 및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 였다. 그리하여 언론은 높은 이윤율이 보장되는 기업으로서 성 장하게 되었으며 언론인은 많은 보수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인기 직업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신문기업이 순이익에서 100대 기업에 등재하게 되었으며 언론 기업과 언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후생복지가 제공되며 또한 세제 상의 많은 혜택이 부여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후 생복지에 관한 것은 어디까지나



◇ 정보의 상품화로 인한 과도한 경쟁

권언유착·언론의 대기업화가 제역할 외면케 해 민중의 정보욕구 성장으로 민중언론 형성 토대 마련

은 1965년대에 강제 경제개혁의 형식으로 탈취하여 어용지화하였 으며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1968년 호텔 건설을 위한 현금차관이라 는 특혜로 포섭하였으며 마지막 남은 동아일보는 1968년 기사를 반공법 위반으로 몰아 굴복시키고 말았다. 이리하여 언론은 권 력과 유착하고 마는 결과를 빚게 된 것이다.

그 이후의 한국신문의 발전과 정은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 라 신문이 기업화·상업화되는 데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제3 공화국 이후의 경제성장과 정부 의 언론정책의 결과 신문은 정권 의 비호하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의 성격이 전연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것이다.

제3공화국 이후로는 경제의 성 장과 정부가 추진한 언론에 대한 경제특혜의 정책에 힘입어 각 언론사들이 기업으로서 비약적인 성장으로 기록하게 되었다. 경제 적 특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금차관의 제공이었다. 현금차 관을 저리로 제공받은 각 신문사 들은 고속운전기를 도입하고 사 육을 신축하는 등 자본축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기업으 로서 착실한 성장을 기할 수 있 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1960년대 를 보면 이 기간 중 경제의 성장 률은 연평균 8-10% 정도인 반면 언론기업들의 성장률은 20%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권언 유착 속에 언론기업의 성장이 이 루어지면서 언론의 상업주의적 경 향이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제 신문은 사회의 공론을 담담하

갈로 억압하면서 80년대와 함께 등장한 것이 5공화국 정권이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당성이 취 약한 정권은 항상 언론에 대해서 무자비한 탄압의 칼을 휘둘러 왔 다.

5공화국은 언론사주들과 연 락이 깊었던 것이 아니라 언론 공익자금'에 의해서 이루어

개별기업의 사주들의 몫이다. 언 론사도 사적 기업으로서 존재하 는 한 언론인에 대한 후생복지 는 어디까지나 언론사주들의 몫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5공 화국에서는 이것이 언론사주들 의 몫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언론 공익자금'에 의해서 이루어

글심는 순서

한국 언론의 위상과 현실

1. 형성과정과 현주소

2. 정부의 방송구조 개편과 언론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3. 언론민주화를 위한운동

졌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언론공익자금은 방송광고비에서 일정한액을 떼어 조성한 자금이다. 따라서 이는 준조세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며 광고비가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언론공익자금이 된 것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다시말해 언론사주의 몫인 언론인 후생복지를 국민들의 돈으로 충당함으로써 이중의 혜택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언론은 이러한 현실에 안주하 면서 정권의 시녀가 되었으며 상 업적인 성장에만 몰두하게 되었 다. 정부의 갖가지 통제 속에서 존재하는 언론이 정부의 통제나 요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것 은 필연이라고 하겠다. 그리하여 정 부는 언론에 대해 여러가지 보도 지침을 통해 언론을 그리고 나아 가서 국민들의 의식을 통제하려 하였으며 언론은 정부의 이러한 보도지침을 거부하기 힘든 구조 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현대 한국의 언론 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기업 의 형태를 띠게 되면서 그 이윤의 실현과정에서 정치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발전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본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소위 말하는 권언유 착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즉 정치권력은 그들의 취약한 정당 성의 기반을 신문 등의 매스컴에 의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권력의 요구에 대해 우리의 언론들은 발타는 저항했 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들의 이윤 실현과 정을 강화시켜 나갔던 것이다.

IV. 맺음말

해방 이후의 언론사에서 정치 권력의 언론탄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언유착관계를 형성 해 온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새 로운 민중언론의 바탕이 되는 기 반을 형성시켜 왔다. 민중부문의 성장은 정보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 하게 된다. 또한 오욕의 역사 속 에서 싹튼 일선 기자들의 자의의 식은 6월항쟁 이후 언론노조를 통한 민주화운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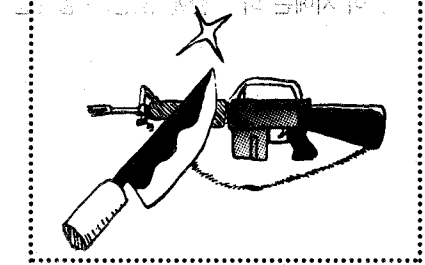
언론의 자유란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탄압에 의해서 그 욕구 가 없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언 론에 대한 권력의 탄압과 이에 대한 언론의 타협은 일반 민중들 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 하고 오히려 언론과 권력에 대한 비판의식만을 심화시켰다. 그리 하여 민중들은 기존의 제도권언 론과는 다른 새로운 민중언론의 출현을 기대해 왔던 것이다. 이 러한 민중의식의 성장은 민중언 론이 성립되는데 중요한 토대적 접적인 기반이 되는 것이다.

채 백
(본교강사·신문학)



가면 쓴 또다른 범죄자와의 전쟁

한 사회는 그시대마다 독특한 유행어를 가지기 마련이다. 현사회의 유행어를 일컬어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우리는 '전쟁'의 홍수속에서 살고 있다. '일시전쟁'의 속수를 채 이루어내기도 전에 급박한 전시상황속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치뤄내야 하는 국민들은 전투태세를 갖추 수 밖에 없다. 양자대전이 종식된지도 한참이나 된 지금 세상은 대량 학살이 속이 화해의 상호공존 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데 유독 한국만이 한두번도 아니고 일상적 으로 국내전을 치뤄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 지 자못 궁금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도 전쟁 소요경비에 엄청난 액수가 책 정될지도 모른다.



고래로부터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자들에 게는 엄격한 사회적 법적 처벌이 행해졌다. 물론 범죄자는 일개인일수도 있으나 대 범죄와의 전쟁'을 치뤄내야 하는 위기상황속에서는 개인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범죄자 를 색출해야 한다. 60년대 이후의 고도의 산업화에 따른 경 제성장은 국민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선사해주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범죄자로 전락시키고 만것이다.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80년대의 3차산업인

서비스부문의 발달은 누구인가 누릴 수 있는 문화활동 공간이라는 명목의 한국 라 스베가스'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사회적 발 전은 '국민적 기대감'을 성취하기도 전에 사회적 범죄를 간헐해 할 시점에 이르렀 다. 물질적 상품의 가진자와 못가지는 자의

회적인 제반문제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범죄행위의 원인, 범죄자의 성격양상과 대 상의 범위, 범죄처벌에 따른 인권문제가 무 엇보다도 중요한 논점인 것이다.

흔히 범죄자라 하면 흉폭하고 무섭게 생긴 흉기를 소지한 자들을 떠올린다. 하지만 사 회에는 가면 쓴 또다른 범죄자들이 존재 하고 있다. '새질서 세상'을 프로모토로 내걸고 있는 자들이 경찰의 총기소유를 종 용하고 있는 지금 진정한 이 사회의 범죄자 가 누구지 다시한번 숙고해야 할 것이다.

이 사회의 '범죄와의 전쟁'은 특정한 범 죄자와의 전쟁이 아니라 범죄자를 처벌하 겠다'고 염포를 놓는 자들과의 전쟁이다. 총기를 소유함으로써 범죄와의 전쟁에서 승 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폭력인과 동시에 범죄인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러한 범죄공포로부터 벗어나 수 있도록 전투복을 차려 입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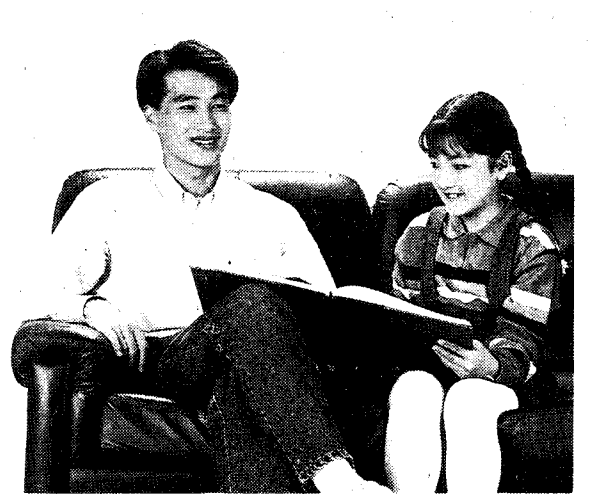
범죄자에게서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닌 범죄자를 소탕하겠다는 그들에서 더 큰 사 회불안을 감지한다면 이러한 사회불안 역시 범죄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총이라는 무기로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다.

작은 꿈들이 모여 힘있는 나라를 만듭니다 ⑥



“오빠! 자동차에서 나오는 가스를 향기롭게 만들수 없을까?”

그때, 오빠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한다.
문명의 발달로 우리생활이 편리해진 사실이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구가 조금씩 나빠지고 있거든.
이젠 우리모두가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선진국에서는 이미 전기로 가는 자동차, 공해없는 수소자동차, 천연가스 자동차 등이 연구 중에 있고 생산되기도 한다.
우리가 실제생활에 이런 차들을 이용하기에는 아직 해결되지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머지않아 그런 날이 오게 될거야.
진영이의 꿈처럼 자동차에서 나오는 가스가 공기를 나쁘게하지 않고 오히려 향기롭게 해주는 차를 타고다닐 수도 있을거고, 이 땅을 아름답게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진영이도 그 꿈을 계속 키워가렴.
“우리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겠다는 꿈을 갖고 산다면 세상은 정말 다들 좋은 곳이 될거야”
K대 환경공학과 2년 김진영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나라의 미래는 밝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작은 꿈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